

고령화 대응 안전망 구축, 의료서비스 강화 국민통합 기여

국가보훈처 올해 업무계획(요약)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2021년도 업무계획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발표했다.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한해 동안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안전망 구축, 의료서비스 품질 강화 및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훈문화 조성 등 4개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업무계획을 상세하게 정리한다.

□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1.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의 추가 개선 및 관련 사료의 적극 수집을 통해 독립운동 공적 미비 등의 사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한다.

심사기준은 미포상 사례의 유형별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독립운동 사료 수집은 △유관기관 업무협약체 운영 강화 △빅데이터 정비를 통해 독립유공자 정보 활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체계

보훈대상 간 보상격차와 함께 의무복무자 부상 시 상이등급에 미달하면 보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보상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훈급여금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 격차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상모형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이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내외 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최저 장애 기준 등을 세부 방안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3. 보훈대상자 중심의 등록·심사체

계 구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위해 국가를 위한 부상 등 희생에 대한 국가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보훈대상자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입증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조사 및 의학·법률자문 등 사실조사를 확대하고, 입증자료 없는 부상자를 위한 신체감정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등록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비대면 심의 확대 △신체검사 전담의 확충으로 상시 신경체계 마련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과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판정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1. 일반복지보다 수준 높은 보훈복지 실현

지난 4년간 보훈급여금을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속 인상하고 특히 참전명예수당·전상수당을 대폭 인상해 왔으나 소득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지원 등 보다 수준 높은 보훈복지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처는 보훈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 생

활조정수당 신설 등 그간 소외됐던 분들에게 대한 생계안정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 안정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보훈대상자의 위기정보(공공요금 체납 등)를 선제적으로 파악, 중점 관리하고 치매예방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평생 건강을 돕는 보훈의료

보훈의료의 인프라 확충으로 급성기-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진료체계를 완성한다. 올해에는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광주보훈병원과 부산보훈병원의 재활센터, 전북권 요양원 등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역 간 보훈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소외지역에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본인부담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차별화된 보훈의료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시범 공급, 뇌인지,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의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보훈특화형 심리재활서비스로 코로나19에 취약한 보훈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12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3. 보훈대상자의 자립 역량 강화

취약계층 보훈대상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및 대부 등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일자리 지원은 고령·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우선 지원 대책을 마

련하되 국가유공자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대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수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대부 지원으로는 올해 1월부터 신규 대출자 대부이율을 종전 대비 0.2%p 인하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연체이자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연체이자 가산 기간 한정 등을 도입한다.

4.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판 뉴딜 일자리 제공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관련 고숙련·장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4월부터 도입한다.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전직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

1. 일상으로 스며드는 보훈문화

보훈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3년 주기 보훈의식조사 실시 등 범부처 협업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훈기념행사는 1회성 행사를 탈피해 국민 중심의 연중 찾아보는 기념식으로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공모를 통해 일반국민이 기념식 기획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보훈문화콘텐츠는 대상자 세분화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전달한다.

국민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큰나무’ 상징의 개선도 추

명패 달아준 후배에 감동, 유엔용사 마스크 지원에 ‘환호’

달라진 보훈 정책, 몸으로 느낀 사례들

독립유공자 후손인 ㄱ씨는 이제까지 독립유공자의 손녀이지만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해 왔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그는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을 매월 46만8,000원씩 지원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여유가 없어 집에서만 지냈는데,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 자장면도 사주고 사람 노릇 할 수 있게 된 듯하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한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처가 만든 국가유공자 명패를 전달하기 위해 해군 〇전대장이 참전유공자 ㄴ씨를 찾았다. 그는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서 활약한 참전용사로 국가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다.

그는 “명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후배 장병들이 직접 찾아와 국가유

공자 명패를 달아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놀랐다.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는 후배를 만나서 반가웠고, 고마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근 국가보훈처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K씨로부터 편지가 왔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참전용사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70년도 더 된 전쟁에 참여해 싸웠던 용사들을 잊지 않고 이 먼 나라까지 마스크와 편지를 보내주다

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예상도 못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춘을 던져 지켰던 한국의 발전과 오늘의 보답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따뜻한 인사를 전해왔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참전유공자 ㄷ씨는 89세의 고령이고 위탁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나 걸려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할 수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이젠 새로 지정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탁병원이 추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진료비도 10분의 1로 줄었다.